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임금 양보 합의는 노동자 희생의 악순환만 낳는다

관련 기사 10 ~ 11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4~7면

국회 본회의
여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12면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갈등

3면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10~11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9면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8면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2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대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성취능력,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중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반발이 만만치 않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고 표현을 살짝 고쳤지만, 그 의도를 숨길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료를 포함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와 뭐가 다른지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오기 어려운 사람들과 감염 위험이 큰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처방 등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미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이 전화처방을 받았다.

평상시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산간·도서 벽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조치가 보완적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처방이나 대리처방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보완적 수단이 아닌 핵심 수단, 즉 의료 시설과 인력이 없는 게 진정한 문제다. 전화나 영상으로 이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크다.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영상 통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장 간단한 검사나 치료도 적용하기 어렵다. 검사와 치료에는 위험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핵심 조치들은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원격의료료를 확대하겠다고 하니 그 동기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도 반대하고 공공의료 확대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도 지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설립된 공공병원은 단 한 개도 없다. 40명 정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몇 년째 시간만 끌다가 결국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조치들(노동조건 개선 등)은 너무 더뎠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 ‘문재인 케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정부가 추진했지만 아직 약속한 70퍼센트



가정호 기자

원격의료는 KT, 삼성 등 대기업 위한 것 KT가 개발한 원격 재활훈련 서비스를 시연하는 의료진

트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보험료는 매년 3퍼센트씩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보통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만성 질환자들이 단순 반복처방을 받고자 할 때 원격의료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병원을 옮길 때 자료 전송이 안 돼 곤란을 겪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방 시기를 놓치는 만성 질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환자의 안전(과 정보)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환자의 정보를 보관, 전송해 줘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정보가 민간 기업의 수중에 넘어가 악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민간 기업에 맡겨 시장을 확대하고 의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의료기기와 제약 기업의 규제를 완화했다. 데이터3법을 통과시켜 민간기업들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헐값에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추진해 민간기업들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주거나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원격의료는 이런 규제 완화 조치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는 고리로 자리매김돼 왔다. KT나 삼성 등 국내 ICT 대기업들이 원격의료 합법화를 그토록 요구해 온 이유이자, 일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이

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업주들의 바람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부풀려진 ‘4차산업혁명’론이나 ICT 기술에 대한 거품은 이미 조금씩 꺼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론의 절정이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가장 앞선 ‘왓슨’의 개발사 아이비엠은 스스로 그 한계를 인정해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 가장 발전한 ICT 기술도 대면 진료를 대체하기는커녕 보완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왓슨’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장기 불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원격의료로 통한 이윤 획득 시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듯하다. 코로나 위기를 원격의료로 활성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를 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 등이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대하면서도 더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태세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낼 뿐이다.

코로나 재확산 대비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과 의료 물자, 숙련된 공공의료 인력이다.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고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도 읽어 보시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맹고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이정구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화웨이를 가리킴)에서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 트럼프는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화웨이 자회사가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통해 화웨이 부회장 멩완저우를 구속했다. 멩완저우는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의 딸로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9년 5월 트럼프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 114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시켰다.

화웨이는 이런 규제를 피해 반도체 설계업체인 자회사 하이실리콘에 설계를 맡기고, 설계된 칩은 주로 대만 기업 TSMC를 통해 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부분 미국 장비를 쓰는 TSMC를 단속하면서 화웨이는 5세대 휴대폰 단말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중국에도 SMIC(中芯国际),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 등

위탁 생산 업체가 있지만, 기술 수준이 떨어져 5G 단말기에 들어가는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하지 못한다. 삼성전자도 7나노를 대량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 때문에 화웨이에게 7나노 칩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그날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15조 원가량)를 투자해 5나노 칩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제재에 호응해 화웨이에게 추가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TSMC가 매출의 15~20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인 화웨이와 결별하고 미국 편을 택한 것은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선 대만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갔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참관국) 지위를 대만에 주자고 제안했고, 중국은 발끈하며 이를 반대했다. 중국에서는 군장성 출신 등을 중심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제조2025

화웨이는 미국 행정명령 직전에 TSMC에 7억 달러여치의 반도체를 긴급 발주했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의 스마트폰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다. 그 뒤부터 화웨이가 곤경에 처할 수는 있지만 5G 시장에서 무너지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에 나섰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CICF)와 상하이 시정부가 만든 상하이반도체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총 22억 5000만 달러(대략 2조 8000억 원)를 중국 1위의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에 투자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수 시장을 이용해 한 등급 낮은 단말기로 버티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의 최신 5G 모델 메이트30은 이전 4G 모델에 비해 부품 국산화율을 25퍼센트에서 41.8퍼센트로 높였다.

트럼프의 '화웨이 죽이기'가 오히려 화웨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다시 화웨이에 제재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화웨이는 미래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의 독주를 용인하면 5G 상에서 구현하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홀로그램 등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야 할 판이다. 그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의 독주를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가 대선용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지적은 단견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것만 봐도 화웨이 패리가 그 저 대선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화웨이 죽이기는 여간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화웨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기술 강국 프로젝트(중국제조2025로 나타난다)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한복판에서 있는 셈이다.

중국의 관변 언론 〈환구시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응해 애플, 퀄컴, 시스코 등 미국 기업을 제재하고 보잉사 항공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어떤 언론은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를 매각해서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에 중국이 어떻게 반격할지는 지켜봐야 할 테지만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만 줄 공산이 크다.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의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 무라타 제작소, 소니 등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화웨이에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긴장 고조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첨예해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심지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내뱉었다.

트럼프의 위협은 말로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연방공무원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들이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트럼프가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자 《포린 폴리시》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1972년 닉슨 독트린 이후 형성된 미·중 관계가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중 '대결별'을 단선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이다. '대결

별' 과정 그 자체가 많은 난관이 도사린 쉽지 않은 길이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차지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서서히 높아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한 정책들이었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가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장기적 추세로 보면,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이 '대결별' 과정의 한 국면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대결별'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 ★ **열을 앞둔 21대 국회 개원: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 ★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 ★ **쌍용차: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 ★ **개학하고 '정상화'하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①

부정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김승주

윤미향 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이자 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의 부정 의혹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기자의 일주일 전 기사,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글에서는 부정 의혹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기사 발행 직후 의혹이 다각도로 빠르게 터져나왔다. 그래서 기자는 윤미향 씨와 정대협·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위안부 운동과 진보진영 흡집내기에만 관심이 있는 우파의 위선적 비판과 달리 좌파적 비판은 운동의 오류를 바로잡아 대의를 계속 고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윤미향 씨와 정의연·정대협의 해명,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는 단체들의 설득력 없는 해명과 오만한 대응이 진보 염원 대중 다수에 계도 냉소와 외면을 낳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정 운용의 부실함과 그릇됨

정의연은 8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국고보조금)을 회계·공시에서 누락했다. 정의연과 통합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여전히 남아 별도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이 돈도 마찬가지로 누락됐다. 회계 부실 문제는 심각해, 정대협 회계에서는 매년 수천만 원이 뭉텅이로 사라졌다.

윤미향 씨는 법인 계좌를 놔두고 개인 계좌로 해외 사업비나 피해자 장례비용 등을 수시로 모금했다. 이것은 공익법인으로서 국제청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피한 것이다. 윤미향 씨는 이렇게 모인 돈을 모두 모금 명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단체들에 ‘재기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안성에 설립된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은 장소 선정과 부지·건물 매입, 운영 과정에서 애초 현대중공업에게 기부를 받아 만들 때 밝힌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된 것이 드러났다.

핵심적인 사안 3가지만 봐도, 정대협·정의연과 그 대표자인 윤미향 씨가 단체 활동과 재정을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공표한 목표대로 일을 추진하고, 회비나 기부받은 돈을 약속대로 집행하고, 재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변동이 생길 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운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 그 과정에서 단체와 윤미향 씨의 해명이 처음에 달랐던 것, 남은 조의금을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들에게 임의로 기부한 것, 김복동 할머니가 재일교포 학생들을 지원하라며 평생 모은 돈을 내놓아 만든 김복동 장학금을 자신들(특히 윤미향 씨 부부)과 가까운 활동가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 의혹도 운동과 단체를 농단한 사례로 보인다.



계속 나오는 부정 의혹과 부실 해명으로 환멸을 일으키고 있는 윤미향 씨

회계 부실 해명도 부실하다. 정의연과 정의연 초기 리더들은 활동가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단순 실수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체 재정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국제청에 공시할 의무가 생긴 단체가 할 만한 변명은 아니다.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잡’에 따르면, 정의연 직원들의 연봉은 정의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다 많다.)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기부한 방한 점퍼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의연이 신속하게 명확한 증거들을 공개한 것을 보면, 다른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의 집약판이 안성 쉼터 문제인 듯하다. 정의연의 해명을 그대로 믿어도 문제가 많다. 해명에 따르면, 김복동 할머니를 통해서 정대협이 현대중공업 정몽준에게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만들도록 기부금을 요청한 것이 2011년이였다. 그런데 정대협은 이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에게 또다시 쉼터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

명성교회 측이 2012년 1월 1일에 쉼

터 지원을 공개 약속하고 집행했으나, 현대중공업이 다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쉼터 구입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마포구에 쉼터가 마련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포구에 할머니들 쉼터를 마련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경기도 안성을 선택했더니?

2012년까지도 빈 공터였던 경기도 안성 부지에는 바로 이 시점에 주거용 주택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대협은 시세보다 최소 두 배로 값을 쳐서 건물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는 올해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자 민주당 이규민과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그리고 부지의 주인이자 쉼터용 주택 시공사 사장인 김모 씨가 연루됐다. 철든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리베이트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게다가 윤미향 씨는 이 건물의 관리를 유급으로 친아버지에게 맡겼다. 그리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쉼터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보통의 운동 지지자들은 재정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폭로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도 최근에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시에 난방(온수



지난해 겨울 난방 지원(온수 매트)을 받아야 했던 이용수 할머니

매트)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해결을 미뤘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대신 온수매트를 설치해 줬다는 소식이 “훈훈한 소식”으로 보도된 바 있다.

돈의 용처도 문제지만 출처도 문제

지난 20년간 윤미향 씨는 정대협의 대표 또는 주도적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점차 정부 부처나 유엔 등 국제 기구의 대화 파트너로서 정치적 위상이 올랐다. 그랬으니 박근혜 정부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를 앞두고 (합의 내용을 잘 설명했느냐와 별개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연락을 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7번)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것도 한 사례다.

정대협·정의연은 불가피하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대행”(대리)한 면이 있다. 위안부라는 명예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나 〈허스토리〉를 보면 그 구실이 잘 나온다.(공교롭게도



사진 이미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수요집회에서 눈물 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김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두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이 모두 윤미향 씨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기업인, 유엔 위원들을 주로 상대하며 후원을 받거나 로비하는 것이 단체의 주요 업무가 될 수록 그 단체와 운동은 전문가족 성격이 강해지고 그 속에서 엘리트주의와 대리주의가 싹트기 쉽다. 보통의 회원들이나 후원자들은 지지금과 응원을 보내는 수동적 처지가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자신들이 이 운동 안에서 그런 처지가 됐다고 느낀 듯하다.

돈의 용처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과 불투명한 해명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돈의 출처 문제도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한다. 즉, 천대나 차별 받는 사람들

의 운동이 정부와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

정의연은 2019년 전체 수입 중 47퍼센트인 약 7억 4000만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주로 여성가족부의 공모 사업으로 충당했다. 2018년에는 약 7억 6000만 원으로 38퍼센트였다(공시에서 누락된 부분과 정대협이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포함).

재벌(현대중공업)과 초대형 교회(명성교회)로부터 10억 원, 15억 원씩 받아 그들의 이미지 세탁에 위안부 운동이 이용되게 한 것도 문제적이다. 이후 김삼환 목사는 8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한 혐의와 목회 세습을 하려 한 일로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이 낳는 문제는 운동이 점점 국

가와 기업 기부자들의 의종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압력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위안부 운동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과거의 제국주의뿐 아니라 현재의 제국주의에도 저항해야 하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오는 압력은 운동의 전망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정부에 의존하는 문제도 그렇다. NGO들은 정부와 밀접해졌고, 특히 민주당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정대협의 주요 인물들도 민주당을 통해 정계로 진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미경,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가 대표적이다. 정대협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이 단체의 대표들은 현재 정의연 이사들이기도 하다)를 거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 하에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뒤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노무현 정부도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 한·일 외교 관계를 우선했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내 임기 동안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정부가 명백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할 때, 정대협·여성단체연합 등 NGO 출신 정치인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도 윤미향 씨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 실패한 길로,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소통도 없이 급히 들어섰던 것이다.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향해 “자기 사육 차리려고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한 다음에, 어디 얹한 데 가서는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일갈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수세적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이어 줄줄이 윤미향 씨의 부정 의혹이 터져 나온 지 2주가 흘렀다.

민중당은 일찍이 5월 11일부터 윤미향 씨를 변호하는 편에 섰다. 의혹들이 더 분명한 나흘 뒤에도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친일·반민족세력의 공격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논평을 냈다. 운동 내에서 활동가이기도 한 피해 당사자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인데 친일 세력 운운한 것은 어색해하기가 이를 데 없다.

민중당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우익들이 윤미향 씨와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한 즉자적인 반발이 작용했을 것이다. 윤미향 씨가 민중당과 가까운 단체들(탈북종업원 송환대책위원회 등)에 기부나 활동가 자녀 장학금, 사업 형태로 지원해 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추정된다.

반면, 정의당은 사실상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5월 20일 윤미향 씨의 법 위반 여부에 주목하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자질 검증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위안부나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때마다 입장을 내 왔지만 이번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개인의 자질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안과 NGO 개혁주의 문제가 놓여 있다.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회와 노동운동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정당한 문제의식들에 주목하고 위안부 운동 발전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언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를 만큼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낙담스러울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의 기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비영리단체지원법’을 제정해 NGO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도 청와대와 총리실과 각 부처에 각종 위원회를 뒤 NGO 관계자들을 적극 흡수했다.

정부에 대한 NGO의 독립성 문제는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NGO 운동의 주창자들은 이것을 “거버넌스 전략”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했다. 정부가 만드는 기관이나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정부의 나쁜 정책을 제3자적이고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정부 의존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고, NGO 활동가들은 점차 그런 환경에 적응해 갔다. 우파 정부들도 어느 정도는 이 구조를 활용했다.

2015년 국제청 공시 자료를 보면, 시민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평균적인 정부 지원금 의존도는 28퍼센트에 이른다.

경기도 안성 심터는 현대중공업 재

벌 정몽준에게, 마포 심터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게 정대협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마련한 것이다. 전자에게선 10억 원을, 후자에게선 14억 7500만 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의 심터 지원은 현대 계열사들 전반의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정몽준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을 것이다. 정몽준은 2012년 봄에 총선에서 당선했고, 2012년 대선에도 나가려고 했었다. 박근혜에 밀려 진작에 출마를 포기했지만 말이다.

현대 일가는 2011년에 삼성 이견희 일가가 만든 것과 같은 거대 기부재단을 만들었다. 그것이 아산나눔재단인데, 초기 출연액 5000억 원 중 2000억 원을 정몽준이 사비로 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친기업 언론들은 정몽준의 이런 활동들을 “기업의 진화하는 사회 공헌”으로 치장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06년 이후 노동단체들이 선정하는 최악의 산업재해 살인 기업에 두 번이나 선정된

나쁜 기업이다.

재벌 님은 행태로 유명한 메가처치의 하나인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의 담임 목사 직을 넘겨주는 세습 시도로 지탄받은 바 있다. 그런데 기독교방송 CBS는 명성교회의 정대협 지원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자세”로 추켜세웠다.

기업도 정부도 아닌 ‘시민의 영역’(정치적 독립)을 표방하는 NGO(비정부기구)가 기업과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는 것은 NGO 활동에 모순을 낳는다.

지난 수십년간 NGO 운동은 대체로 이 모순을 기꺼이 자신의 길로 받아들이어 왔다. 정부·기업과 진행하는 거버넌스(협치)에 참여하는 것,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이제는 단체의 역량과 위상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NGO 운동이 우경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게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을 퇴치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한 혁명적 조치로 어떻게 전염병 확산을 막았는지 살펴본다.

혁명이 일어난 사회라면 전염병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917년 러시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계급은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자마자 이들은 유럽의 많은 지역을 휩쓴 질병들의 유행에 대처해야 했다.

이후 4년 동안 콜레라, 천연두, “스페인 독감”이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티푸스였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티푸스에 걸리면 셋 중 하나가 목숨을 잃었다.

티푸스의 병원체는 모미를 통해서 전염됐다. 모미는 숙주의 옷에 서식하며 더럽고 복적대고 위생이 열악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번성한다.

제1차세계대전은 모미의 완벽한 온상이었다. 군복에 들끓는 이가 군대의 진퇴를 따라 퍼졌다.

그러다가 폐허가 된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이가 퍼지거나, 황폐화된 농촌과 포로 수용소를 휩쓸었다. 동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시달렸다.

러시아 혁명 후 “백군”이 준동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사회를 분쇄하려 들었다. 백군은 14개국에서 온 침략군과 동맹을 맺고 내전을 일으켰다.

굶주린 사람들이 약탈자들을 피해 도시로 떠 지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도시는 포화 상태인데다가 양질의 주택이 남아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가 창궐했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1919년에 보건 노동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동지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이를 박멸하지 않으면 이가 사회주의를 박멸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이미 1914년에도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였고, 제1차세계대전과 내전으로 근대적 산업 대부분이 파괴됐다.

소비에트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민주적 평의회에 의해 운영된 러시아사회는 이와 정면대결을 했다. 노동자 통제 하에 보건 서비스가 국유화·중앙집중화되고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는 티푸스 퇴치 계획 수립에서 결정적이었다. 첫째 과제는 의료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일 때 러시아를 방문한 노르웨이 언론인 야코브 프리스는 의약품 공급을 담당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의사 페르부힌을 인터뷰했다.

“약국을 국유화한 덕에, 빈약한 의약품 재고가 그래도 공정하게 배분됐습니다. 온갖 외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보건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의약품 공장을 새로 짓고, 투기꾼들에게서 막대한 물량을 몰수했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정부도 인민의 건강을 이렇게 잘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스페인 독감’을 서방 세계보다 잘 이겨 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큰 힘으로 전염병과 싸울 수 있습니다.”

프리스는 노르웨이노동당 당원이고, 노르웨이노동당은 1917년 이후 혁명적 당들의 국제 조직인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에 가입했다. 프리스와 볼셰비키 당원인 페르부힌은 상황을 장밋빛으로 그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노동자 통제

그러나 미국인 교수 K 데이비드 패터슨이 1993년에 쓴 글도 프리스의 증언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패터슨은 이렇게 썼다. “대중 교육에 막대한 노력이 들었다. 특별 선전물이 있는 열차가 소비에트 치하의 지역을 순회했다.

“1919년 11월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기차역들에서 방역조가 하루에 승객 4만~5만 명에게 방역 조치를 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에트 정부는 티푸스 환자 병상 약 25만 개를 설치하고 철로와 수로를 따라 검역소 약 300곳을 세웠다.

“군대는 병력을 이에서 구제하려고 목욕·방역 담당 파견대를 수백여 개 편성했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연구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소가 개설됐다.

이어서 패터슨은 이렇게 썼다. “이 박멸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적군(赤軍)의 한 검역소에서는 죽은 이가 5센티미터 두께로 바닥에 쌓이기도 했다.

“이 박멸, 환자 격리, 교육은 전염병 퇴치에 분명 도움이 됐다.”

볼셰비키는 의료 시설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주택·학교 등 노동계급의 다른 생활 현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전념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1919년 소비에트가 발행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산다. 아직도 저승사자가 도시 근교를 어슬렁거리며 노동계급 거주지에 마수를 뻗치고 있다.”

결정적으로 티푸스 구제 조치는 상명하달식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조치들은 노동자 조직들의 네트워크에 의존했고, 그런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됐다.

이르면 1918년부터 러시아 곳곳의 도시와 큰 마을에서 전염병퇴치 노동자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주택과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대중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비누를 배급하고, 이를 박멸하는 것이었다. 볼셰비키, 노동조합, 여성 단체, 청년 단체들이 모두 질병에 맞선 투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위원회들의 대표자들—그들



평범한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질병에 맞섰다. 공중 보건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볼셰비키의 선전 열차

자신도 노동자이거나 농민이었다—은 많은 주민들에게 과학적 정보를 전파했다.

노동계급의 이런 참여가 질병 퇴치에서 핵심적이었다.

지지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고 보건 담당자 니콜라이 세마시코는 1920년에 이렇게 썼다. “티푸스와 콜레라 유행은 주로 노동자 위원회와 농민 위원회의 도움으로 저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인민위원회는 주민의 지지와 조력을 확보해야만 이 가난하고 황폐한 러시아에 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보낸 약간의 구호 물품이 러시아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볼셰비키의 적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 적십자회는 백군 지원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을 연구한 역사가 줄리아 F 어윈은 이렇게 썼다. “미국 적십자회 직원들은 부인하겠지만, 미국 적십자회의 구호 활동은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계획과 집행 모두 철저하게 정치적이었다.

“오늘날과 꼭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도 미국의 해외 원조는 미국 대외 관계의 중심축을 반영했다.”

1918~1922년에 러시아에서 티푸스로 사망한 사람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적군 사령관이었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아버지도 티푸스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자 국가 러시아는 티푸스 사망자 수를 줄였다. 패터슨은 이렇게 썼다. “보건 당국의 끈질긴 공세로 1922년 이후 티푸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오시프 스탈린이 주도한 관료적 반혁명이 노동자 권력을 교살하자 이가(티푸스도) 다시 창궐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가혹하게 착취받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 민주주의가 모조리 파괴되면서 티푸스가 다시 창궐했다. 특히 수용소에서 심각했다.

1938년 러시아 동부 콜리마 지구

에 있는 수용소 한 곳에서만 재소자 수만 명이 티푸스로 사망했다고 한다.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혁명의 정수가 스탈린주의에 의해 파괴됐다.

그렇다고 해서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몇 년 동안 성취된 것을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 혁명적 언론인 존 리드는 1920년에 티푸스로 사망하기 며칠 전 당시 상황을 요약한 기사를 썼다.

“[노동자 권력이 들어섰다고 해서 — 킴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만사가 형통이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빈곤과 질병, 필사적이고 끝없는 투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티푸스, 간헐열,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렸다.

“2년 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약화된 인민들의 건강은 질병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의약품 반입을 가로막는 연합국의 용의주도한 러시아 봉쇄 정책 때문에 이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인민위원회는 거대한 위생 서비스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이전까지만 해도 의사를 구경조차 할 수 없던 러시아 전역에서 지역 소비에트들이 운영하는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구마다 새로운 병원이 최소 하나씩, 보통은 두세 개 들어섰다.

“밝은 빛깔의 포스터 수십만 장이 곳곳에 붙었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집을 청소하고 잘 씻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모든 도시마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산부인과가 있었다.”

전쟁과 기근이 한창인 와중에 볼셰비키는 한 세기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보다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질병 퇴치 정책을 시행했다.

가난과 전염병 대유행이 휩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4호 / 번역 김준호

러시아 혁명을 목격한

미국 언론인 존 리드의 보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차역 대합실은 창문이 깨져 있었다. 수도관이 터졌고 바닥이 얼어 있었다.

이런 바닥과 탁자, 벤치, 여기저기에 병사들이 누워 있었다. 셀수 없이 많은 병사들이 잿빛 무더기를 이룬 채 티푸스로 인한 섬망 상태에 빠져 뒤척이거나 헛소리를 중얼댔다.

다른 대합실도 상태는 마찬가지였지만 한편에 붉은 현수막과 혁명 포스터로 밝게 꾸며진 무대가 있었고, 무대 앞 탁자 위에 놓인 등유 램프가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앞에 군복 차림의 청년 한 명이 서서 잿빛 무더기를 이룬 군인들에게 연설을 했다. 군인들은 무표정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청년의 연설을 숨죽여 경청했다.

청년은 공산당 지지를 선동하며 군인들에게 당에 가입하고 당 기관지에 기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지도 모릅니다. 유럽 동지들이 우리를 돕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게다가 유럽 혁명을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맥을 것도 충분치 않지만, 우리보다도 못 먹는 형제들을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이 어둠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반쯤은 추위에 얼어붙고 땀만 남은 몸골이었지만, 모자를 벗어 흔들고 움푹 패인 눈에서 형형한 빛을 내뿜었다.

존 리드, 미국의 혁명적 신문 〈리버레이터〉

1920년 12월호에서 발췌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 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견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을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기도 한다. 여전히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고, 경제의 주요 부문을 사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따라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 시대의 근본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라면 비켜갈 수 없는 쟁점이다.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의 노동자와 서민들을 고무한 노동자 혁명이었다.

당시 러시아에서 낡은 차르 왕정 국가는 혁명으로 분쇄됐다.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 군장성 같은 옛 지배계급은 권력을 모두 잃었다.

옛 전제정 대신에 노동자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노동자 국가는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로 조직됐고, 진정으로 민주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노동계급에 이익이 되도록 사회를 운영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러시아 국내 반혁명 세력이 혁명 정부를 분쇄하려 협공을 펴, 처참한 내전이 일어났다.

혁명 정부는 긴 내전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러나 혁명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노동계급은 내전 과정에서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쟁과 기아 등으로 사망했다. 노동자 없는 노동자 권력은 껌대기에 불과했고, 국가기구와 공산당은 급속히 관료화됐다.

설상가상으로 1923년 독일 혁명 패배, 1926년 영국 총파업 패배, 1927년 중국 혁명 패배라는 불행한 상황이 전개됐다. 국제 혁명의 잇단 패배는 심각한 일이었다. 레닌과 트로츠키 같은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혁명이 주요 선진국들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 때문에 오래 유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부활하는 반혁명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가기구를 손에 쥔 관료들은 점차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기에, 국제 혁명에 헌신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가 달린 국가기구를 자칫 위협에 빠뜨릴 도박이었다. 레닌이 사망한 후, 1924년 스탈린은 소련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신흥 관료층은 스탈린의 주장에 찬동했다.

소련 사회에서 결정적인 전환점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노동자들에 의해 파괴된 스탈린 동상. 동구권에서 벌어진 노동계급의 이런 저항은 스탈린주의 체제의 계급적 성격을 보여 준다

은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를 맞아 1928~1929년에 일어났다. 특히 서방의 군사 위협에 직면해, 관료들은 러시아 혁명과 완전히 단절하고 급속한 공업화의 길로 치달았다. 농민은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고 집단농장에 들어가야 했다. 저항하면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피살됐다.

관료들이 자본축적을 위해 급속한 공업화를 수행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는 공존할 수 없었다. 노동자는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몽땅 빼앗겼다. 단체행동권 같은 노동기본권도 모두 빼앗겼다.

스탈린주의 체제와 진정한 볼셰비키 전통 사이에는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의 표현대로 “피의 강물”이 흘렀다. 1930년대 스탈린 체제의 공포정치로 혁명기 지도자들은 거의 다 제거됐다. 한 연구를 보면, 1930~1932년 ‘반혁명 및 특별위험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해 2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1937~1938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매해 30만 명을 넘었다(The Soviet century, Moshe Lewin, Verso, 2005). 이런 대규모 처형 사태는 러시아 혁명을 뒤집는 근본적인 변화가 소련에서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 모든 일들은 반혁명이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이런 반혁명을 거쳐 형성된 옛 소련 사회는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조금도 관련 없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물론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는 미국과 서유럽의 시장 자본주의와 그 형태가 달랐다. 경제는 중앙 국가기구가 ‘계획’했고, 사기업이 거의 없었으며, 국내 시장 경쟁도 없었다.

그러나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세계경제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었는지를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 옛 소련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쟁의 압력을 받고 이에 대응해야 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인 토니 클리프(1917~2000)는 한 노동자 국가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압력을 계속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이렇게 비유했다.

“미친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하면 사람도 맞대응해야 한다. 개가 폭력적이면 사람도 폭력으로 맞아야 한다. ... 그러나 어느 쪽도 상대방을 죽일 만큼 강력하지 못해서 몇 달 동안 같은 방에서 서로 대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과 개가 똑같은 물골을 하게 될 것이다.”(《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책갈피, 2012)

특히, 옛 소련 지배 관료들은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에 직면해 있었다. 군사적 경쟁 압력이 지배 관료의 ‘계획’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됐다.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자들은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뒤처지지 않게 애써야 한다. 경쟁국들이 착취율을 높여 더 많은 잉여를 투자한다면,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착취율을 높여야 한다. 경쟁국들이 항상 신규 기계설비비와 기술혁신에 투자하므로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에서 군사적 경쟁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국 내부의 노동과정을 재편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을 형성한다. 자본들의 경제적 경쟁이 각 기업 내부의 혁신을 추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압력을 받으면서 서방 강대국과 경쟁해 온 소련은 그 내부의 노동과정과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축적(기계 등 불변자본에 대한 투자)이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되면서, 노동자들의 필요는 공업화 압력에 종속됐다. 소비가 축적에 종속됐고, 노동자들은 축적 과정의 희생자가 됐다.

이처럼 외부의 강제적이고 경쟁적인 축적 압력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이다.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자본주의는 1930~197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흐름에서 유별난 게 아니었다. 이때 국가와 자본의 융합, 즉 국가자본주의 경향은 1930년대 대불황에 의해 가속됐고,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자본주의의 유력한 경향이였다. 옛 소련 등은 서방의 국가자본주의 경향에 견줘 극단화(전면화)된 형태였을 뿐이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소련 모델은 동유럽, 중국, 북한 등지로 확산됐다.

같은 착취적 생산관계 하에서도 서로 다른 소유관계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사기업, 다국적기업들이 큰 모순 없이 공존하는 것을 보라. 오히려 이들은 산업적 연관 관계를 긴밀하게 맺으며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즉, 중국 국유기업과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동시에 노동자 착취 면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은 “싸우는 형제”다.

옛 소련은 결국 붕괴했고, 중국도 지난 40년 동안 시장 친화적 개혁·개방을 진행해 왔다.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

라는 맥락 속에서 이들은 모두 경제의 일국적 편제를 포기했다.

이후 진행된 민영화와 시장경제로의 이동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퇴보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그 사회의 지배층이 다른 세력으로 교체되는 상당한 변화가 수반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배 관료 대부분이 특권과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악명 높은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 요원이었던 푸틴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하는 것을 보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오쩌둥 하에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에 열렬히 충성했던 바로 그 관료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 친화적 ‘개혁’에 스스로 앞장섰고, 그의 자식들은 유력 기업의 경영자가 됐다.

이런 점도 옛 소련이든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이든 모두 시장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임을 보여 주는 증거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옛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의 성격에 대해 명료하지 않으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사상과 활동은 엉망진창이 된다. 특히, 국유·국영 경제가 곧 사회주의라는 생각, 노동계급의 자체 행동 없이도 소련군 탱크가 사회주의를 갖다 줄 수 있다는 생각(북한), 또는 도시 중간계급 지식인이 이끈 농민 게릴라가 노동계급에 해방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중국) 따위는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마르크스)이라는 사회주의의 원칙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한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적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소비에트 같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력 기구들을 통해 이뤄진다. 마르크스가 1871년 파리코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국유화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자 국가의 모습을 봤다고 좋아한 까닭이다.

우리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혁명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품었던 이상과 전망을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을 확립하고, 이를 구현할 혁명적 정치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추천 책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폴 푸트, 핼 드레이퍼 지음, 차승일 엮음, 책갈피, 232쪽, 12,000원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프릭크 블라우보호프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양대노총 지도부도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노동운동 안팎에서 자주 거론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을 양보하거나, 그 방안의 하나로 단축근로지원금제도를 활용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독일의 ‘사회적 대화’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코로나 참사는 경제를 전에 없던 급격한 위기로 밀어 넣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연구소(IFO)는 경제가 3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멈추면 독일 경제가 10~20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런 속도로 경제가 추락했던 적은 1923년과 1931년밖에 없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의 헛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한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은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을 이중으로 좌절시킨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허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고 소득이 대거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산출량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주식·신용 거품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전부터 노동조합들과 시민당, 녹색당, 많은 경제학자들은 헌법상의 균형 재정 준칙을 완화하고 공공투자를 확장하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

구제금융

경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구제금융책을 내놓고 있다. 줄도산을 막는 데에는 아낌 없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들과 기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다수의 대중은 대체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위기가 한창인 와중에 독일 대기업 주주들은 440억 유로(약 56조 5000억 원)어치의 배당금을 받았다.

독일 정부는 1560억 유로(약 2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는데, 그중 500억 유로는 소기업, 자영업, 공공시설을, 550억 유로는 보건시스템과 방역을, 330억 유로 이상은 기업주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다. 독일연방 정부가 마련한 6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은 지분 매입, 구제금융, 신용 보증의 형태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런 신용의 상당 부분은 아마 상환되지 않을 것이



건강으로 이윤몰이 말라!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슈투트가르트 병원 의료진

다. 여기에 더해 수십억 유로가 감염병 호법에 따른 제한 조치와 단축근로지원금* 등에 쓰일 것이다.

또, 그 뒤에도 독일 정부는 10~250인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발표(4월 6일)했다. 원래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주 거래 은행을 통해 독일재건은행의 소규모 구제 금융을 받게 하고 그 은행들이 신용리스크의 10퍼센트만을 부담하게 하려 했는데, 정작 그럴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은행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4월 6일자 <쥬트도이체 차이팅>에 따르면 독일의 구제금융 규모는 이미 총 1조 1730억 유로(약 1578조 원)에 이른다. 독일 GDP의 3분의 1 수준이다.

가난의 뿔 단축근로지원금

정부는 대중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인색하다. 기업들이 받는 지원이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침체와 빈곤의 규모에 비추 보면, 위기 동안에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게 하거나 기초보장을 확대하는 조처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이 사회적 대화의 본보기로 교묘하게 제시하는 단축근로지원금도 대중을 위한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단축근로지원금은 결국 기업이 치려야 할 임금비용과 사회보장비를 100퍼센트 국가가 대신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규모는 상당하다. 3월에 47만 개 기업이 단축근로를 시행했고, 국가는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35만 명의 임금을 떼었다.

게다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의 단축근로지원금은 너무 낮아서, 노동자들은 임금이 40퍼센트나 삭감됐다(자녀가 있는 경우 35퍼센트), 저임금 노동자,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문에 있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임금 손실을 버티기 힘들다.

이는 임금 통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8년 전일제 노동자 중에서 저임금 기준인 2200유로(29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거의 5명 중

1명 꼴이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1000만 명에 가까운 시간제 노동자들은 주당 약 26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평균 2515유로를 받았다. 비숙련직 시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400~1700유로(190만~230만 원)에 불과했다. 부문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청소, 요식업, 우편 배달 같은 부문의 노동자들은 평균보다 25~40퍼센트 더 적게 받았다.

300만 명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뿐 아니라 평균 25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미니잡 [월급이 400유로 이하로 정해진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약 800만 명도 계약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소득이 줄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마음껏 유동성[현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유동성이 없다. 사회의 가장 부유한 10퍼센트는 전체 부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 하위 50퍼센트는 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소득 하위 10퍼센트는 전체 부의 1.3퍼센트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 다수는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사회적 연대’인가 계급정치인가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얼마나 길고 깊게 지속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수출 지향적인 독일 경제가 오랜 기간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세계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누가 1조 3300억 유로(2019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독일의 수출품을 사겠는가? 좌파와 노동운동은 오래 지속될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 위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좌파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포착하고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좌파 개혁주의 정당]

좌파당(디링케)의 일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 3월 19일 좌파당 의원 디트마어 바르치는 위기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메르켈 총리를 칭송했고, 좌파진영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연대를 촉진하며, 국가·대중·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경제안정화기금(WSF)에도 동의했다. 이것은 좌파당이 정부와 함께 위기를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혁 요구를 한정하려 한다는 불길한 인상을 준다.

3월 13일 독일노총(DGB) 위원장 호프만도 독일 경영자단체연합(BDA), 독일 정부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이와 비슷한 행보를 취했다. 이 성명에서 그들은 외관상 성공적으로 보이는 2008~2009년 위기 때의 ‘사회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사·정이 또다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차이를 넘어 공동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자들의 희생도 요구했다. 예컨대 휴가를 내거나 시간의 근무를 줄여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의 이러한 양보는 막대한 임금 삭감을 초래할 뿐이다.

좌파당과 노동조합은 경영자들,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구제 정책의 계급적 내용을 쟁점화시키고,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들의 위기를 12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이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대중의 이익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광범한 운동이 벌

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독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단축근로지원금에 더해 임금의 80~90퍼센트를 보전하라고 사측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H&M 체인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 손실을 받아들이거나 기껏해야 방어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필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계급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지급을 요구하고 무리한 근무 시간에 반대하며 일시적인 추가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거나 사회 전체를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사방에서 듣는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처럼 부상하는 계급의식, 요구, 행동을 기회로 삼고 지지할 수 있다.

좌파에게는 이러한 요구와 투쟁을 일반화하고 정치화할 과제가 있다. 임금의 90퍼센트를 보전하도록 단축근로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은 좋은 출발점이다. 좌파당 원내교섭단체가 발의한 법안에도 좋은 요구들이 전단지 한 장을 가득 채울 만큼 있다.

1.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전후 배상 때 그랬던 것처럼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재산세를 물릴 것
 2. 필수 작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일회용 장갑, 검사 키트 등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을 도입할 것
 3. 필수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 500유로를 2020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매월 지급할 것
 4.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장에서의 해고 금지
 5. 유치원 휴원이나 학교 휴교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임금을 보장할 것
 6. 노인과 소득 감소자 등에 대한 복지 수당과 기초 보장을 강화하여 매월 200유로(27만 원)를 3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매월 지급할 것
 7. 강제 철거,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을 금지할 것
 8. 최소 6개월 동안 세입자를 내쫓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것
 9. 이 기간에 밀린 집세에서 이자와 원금의 절반을 탕감할 것
- 이러한 요구가 실현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변화일 것이다. 이제 당장 필요한 구제 조치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전 사회적이고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근본적인 사회적 격변과 변화는 특히 위기 시기에 발생한다. 이런 시기에는 고통과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순간적인 급진화가 정치적 상황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 좌파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
2020년 4월 9일자 / 번역 이현주

Q 용어설명

단축근로지원금

기업이 조업을 단축하면 노동자 급여의 최대 67퍼센트와 5대보험 고용주 부담액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2008년과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독일 노·사·정은 이 제도의 지급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에 합의했다.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한국 노동운동 내에서도 일자리 지키기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독일 금속노조 등의 임금 양보 합의는 일 자리를 지키는 대안으로 국내에서 자주 소개된다. 지난 3월에도 독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고용-임금을 맞바꾸는 합의를 체결해 국내 노동운동 일각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임금 양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들춰낸다.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성이 있다. 다만 현 시점을 고려해, 그리스 등의 당시 노동자 투쟁을 언급한 부분은 제하고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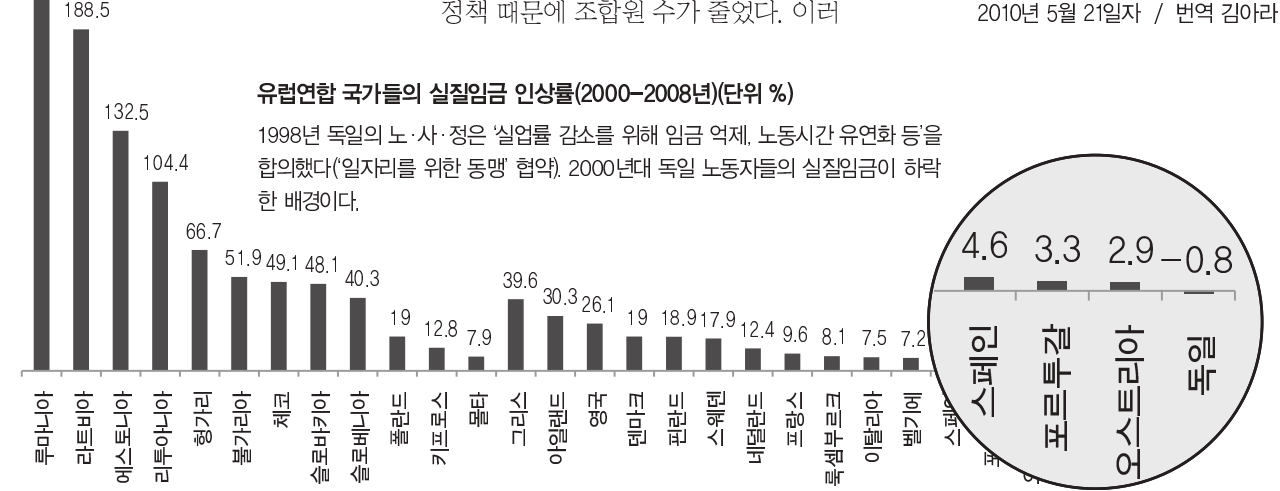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혹독한 실질임금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래프 참조) [독일노총(DGB)의 싱크탱크] 한스 뵘클러 재단의 경제 사회과학 연구소(WSI)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추세는 독일 국내 경기가 마비된 주요 원인이다. 독일의 수출 산업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내수경제가 받은 부정적 영향이 그 이점을 상쇄했다고 한다.

WSI 연구진은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물가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분배를 개선하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체교섭을 앞둔 노조 지도자들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독일 노조원들의 전투성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독일 노동자 1000명당 연간 파업 일수는 5.2일(2008년)로 국제적으로 꼴찌 수준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중요한 이유다. 싸우지 않으면 자본가로부터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한다. 동시에 경제가 성장했던 최근 몇 년 동안 산별단체협약이 체계적으로 약화됐다. 노조는 기업별협약과 개방조항[산별단체협약에서 벗어나는 조항]에 동의하고 “텀핑 임금”[지나치게싼 임금]을 주는 저렴한 업체에게 일자리를 외주화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동참했다. 이 모든 것은 기업 또는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올해[2010년] 단체협약에서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는 “고용 보장”을 위한다며 모든 임금 인상 요구와 노동자 동원을 포기했다. 그러나 단기노동을 통한 고용 보장의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납세자가 치르며 납세자의 다수는 노동자이다.



타협과 양보 정치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

게다가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려고 임금과 일자리를 계속 삭감할 것이 분명하다.

독일 공공서비스노조(ver.di)는 임금을 인상하고 “은행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 내수를 진작하라고 요구했지만, 노동자 약 130만 명에게 적용될 단체협상에서는 26개월간 임금을 점진적으로 2.3퍼센트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 1.2퍼센트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과 다가를 복지 삭감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노동조합은 다시금 사회적 대화로의 복귀를 추구하고 있다.

양보 정책이 낳는 폐해

임금 양보 정책은 여러 면에서 노조를 막다른 길로 이끈다. 경쟁력을 위해 투쟁 없이 임금을 양보함으로써 노조 대표자들은 임금 삭감과 사회 복지비 삭감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면, 경쟁 회사의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실질임금 감소는 다른 경쟁 국가에도 임금 삭감과 복지 삭감 압력을 준다. 이는 독일이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려 하는 그 나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가치는 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함께 없애고 자본에 대해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함께 연대해 싸우는 데에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로는 노동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 양보 정책은 노동자의 투쟁 조직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단지 대량 실업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의 양보 정책 때문에 조합원 수가 줄었다. 이러

한 정치는 “임금 양보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의 오랜] 구호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이 거의 관철되지 않는데도 왜 파업기금을 내야 하는지 자문하게 한다. 게다가 위기 때는 많은 노동자들이 주눅들고 일자리를 걱정하기 때문에 투쟁 방침을 시행하기가 더 까다롭다.

노동조합은 동질적이지 않다. 그들의 지도부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독일 사회민주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독일의 지난 두 정부[1998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 2005년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복지를 축소하고 실질 임금을 삭감해 독일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 최상층에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았고,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시위나 심지어 파업으로 지나치게 압력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 정책에 대해 많은 항의가 있었고 이는 마침내 독일 좌파당(리더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됐다. 독일 사회민주당 왼쪽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 좌파당은 사회민주당 세력이 내세우는 경쟁력 논리가 노동조합에 스며드는 것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좌파당이 이러한 방향에서 한 실천은 너무 적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의회·정당과 노동조합의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

출처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
2010년 5월 21일자 / 번역 김아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한다. 이 두려움은 기업들을 구제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 지출에서 비롯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14개 선진국의 총 부채는 1960년에 국민소득 대비 120퍼센트였는데 2017년에는 260퍼센트로 증가했다. 이 총 부채에는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금융 시장에서는 국민소득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초점이 된다. 올해에는 경제가 급격히 수축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이 비율이 치솟을 것이다.

이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정부는 부채에 대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지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최근 유출된 재무부 문건은 영국이 “국가 부채”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 적자(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빌려야 하는 비용)가 3370억 파운드(약 50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악의 경우 재정 적자는 5160억 파운드(약 77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재정 적자가 550억 파운드(약 83조 원) 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니나 다를까 재무부의 처방은 또다시 복지 삭감, 세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 한바탕 긴축을 펴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존 메이네드 케인스에게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정부 부채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에서 경제가 빨리 회복하면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임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는 영란은행이 “화폐적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즉, 추가적인 정부 지출을 위해 사실상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 지출이 생산적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되고, 생산적 투자 덕에 경제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마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생산 경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는 듯이 논리를 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 부채가 아니라 민간 부채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민간 부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발표한 “통화안정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를 말하는 듯하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역자에 따르면 팬데믹이 오기 전 가계와 은행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했다.

그러나 기업 부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기업 레버리지, 즉 모든 금융 상장 기업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초에 20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게다가 고(高)레버리지 기업들(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위 25퍼센트인 기업들)은 이 수치가 거의 최고 기록에 근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말처럼 “기업들은 위험하리만치 부채에 취해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부채를 잔뜩 짴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부채가 매우 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시기에 부채는 그 비용과 상관 없이 유독해진다. 수익이 곤두박질치면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채 만기일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 전염병처럼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체제가 뻣겨버린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은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

런던경영대(LBS)는 영국 가계 지출이 4월 41.2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매우 상이한 처지들을 뭉뚱그린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고소득자들은 저축률이 올랐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부채가 늘어나고 저축이 줄었으며 초과 인출을 하는 바람에 은행 수수료 지출이 급증했다.”

다시 말해, 잘 사는 사람들은 외출 제한령이 떨어지자 고급 식당이나 휴가 등의 여흥에 쓰던 비용을 줄이고 대체로 온전히 유지된 소득을 더 많이 저축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이 사라져 고금분투하며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안전하지 않은 일터로 돌려보내려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업들은 더 많은 값싼 신용을 제공받고 있어서 기업 부채 위기가 계속 고조될 것이다.

번역 이원웅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과거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설치돼 운영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를 재가동하려는 법이다.

과거사위는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절까지 “반민주적 및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이런 취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사나 조사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독재 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만행들을 재조사하고 바로잡기 어려웠다.

또한 신청 기간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돼 이런 종류의 법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도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과거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그런 경우였다.

따라서 개정 과거사법이 신청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강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제공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빠진 것은 이 법안의 허점을 보여 준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2014년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논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의 좌절된 경험에 바탕해 강제 수사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결국 새 과거사위의 성과 여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세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렸다. 그 점에서 세월호 사례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를 단순히 지지·엄호하는 기조로는 그런 세력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폭력 행위자와 명령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광주항쟁 진압 과정의

남은 진실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도 다시 생길 과거사위원회의 몫이 될 듯하다. 광주항쟁도 집단 사격이나 무장 헬기의 발포·사격 명령자 등 세부적으로 밝혀내야 할 중요한 미확인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과거사위 권한이 강화되지 않아서 한계가 예상된다. 국가권력의 핵심인 군부를 상대로 비공개 문서와 자백들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라서 더더욱 그렇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 작성된 계엄 선포와 무력 진압 음모 건도 수사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남아공 모델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 모델을 제시한 것은 시사적이다. 이 위원회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정부인 넬슨 만델라 정부가 기존 국가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범죄들을 밝혀내

려고 만든 기구였다.(그와 동시에 흑인 저항 세력의 군사 공격도 규명 대상이었다.)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들의 진실규명 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핵심은 자백하면 사면을 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만델라 정부가 흑인 노동계급 대중의 진실과 처벌을 향한 염원과 백인 지배계급의 이익 사이에서 절충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목한 것도 바로 자백과 용서, 화해 과정을 밟자는 것이다.

변화의 열망이 사회 전반에 가득한 상황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이전 정권의 하수인들이 조건부 자백을 적극 활용했다. 진실을 살살이 자백하고 나면 그들의 범죄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으로부터도 면책됐다. 국가도 배상 책임에서 면제됐다. 백인 정권의 고위 인사들은 재판

에서 무죄가 나와 사면권조차 운운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에서도, 흑인 노동계급 대중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용자 염원 부응

개정 과거사법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합의한 또 다른 중요한 법은 개정 고용보험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도 통합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더니, 이번 개정안에서 몽땅 빼버렸다. 심지어 복잡한 절차나 논의 없이도 당장 적용이 가능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특고 노동자들(골프장 캐디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7년에 정부는 이들을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나마 예술인 적용이란 것도 특례 신설 방식이어서 당사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 모두 특수고용직 적용을 미루자는 데 전혀 이견이 없다. 특고 포함을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급한 안건이 아니니 21대 국회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한국노총 임원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도 오히려 여야야합을 주도했다. 법안 발의는 노동

계와 하고, 실제로 통과시키는 법안은 사용자 눈치를 보는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은 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벌어진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해 왔는데, 사용자들은 거꾸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선불리 고용보험을 적용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와 행동을 고무할까 봐 걱정한다.

한편, 교원노조법 개악안도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수노조의 정치 활동, 노조 활동에 제약이 가해져 결코 개선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 주고 싶은데 판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해 왔지만, 정부도 의지가 없다.

반면, n번방 처벌 후속법안들은 과도한 사생활 사전 검열 위험과 실질적 단속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도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은 벌써부터 여야 협치를 내세워 개혁 약속에서 슬금슬금 후퇴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경제 회생을 위해 공식정치가 안정적 협치를 이뤄주길 바라는 사용자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해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이어가려 한다. 그래야 개혁 약속을 어기는 것에 야당 핑계를 계속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5·18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던 시각에 경찰과 종로구청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찬막 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사진 출처: 민주노동당